

전남도, 완도 노화~보길도 해저관로 뚫는다

섬지역 가뭄 근본 해결 총력 400억 들여 상수관로 31km 광역상수도 구축사업 추진

전남도가 완도 노화도·보길도 등 도서지역의 가뭄 해결을 위해 도내에서 가장 긴 상수도관로를 바다 밑에 묻어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투입되는 예산도 400억원대에 이른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완도 노화도·보길도는

8000여명이 거주하는 섬지역으로, 그동안 잦은 가뭄으로 상수도 공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지역 중 한 곳이다.

2017년 가뭄으로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제한급수를 했다. 올해도 지속적인 가뭄으로 지난 3월부터 제한급수에 들어가 2일 급수·8일 단수를 하고 있어 지역주민이 기초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김영록 전남지사는 최근 노화·보길도 가뭄현장을 방문해 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 가뭄으로 상수도 공급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해저관로를 통

한 광역상수도 구축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완도군은 '완도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해저관로를 통한 광역상수도 구축사업을 반영하고, 타당성 검토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기 위한 예산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해 상수관로 31km(해저 9.2km·육상 21.8km)의 시설이 필요하며, 총 433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해저관로는 목포 1곳(14.8km), 고흥 2곳(3.5km, 5.5km) 등 도내에 3곳에 설치돼 있으며, 무안은 80억원을 들여 탄도에 3.1km 상수관

로 설치공사를 추진중이다. 광역상수도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노화·보길 지역뿐만 아니라 해저관로를 경유하는 넓도, 백일도, 흑일도, 마라도까지 총 6개 섬 8000여 도민이 안심하고 깨끗한 수도물을 사용하게 된다.

서은수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섬지역 물 걱정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해저관로를 통한 광역상수도 구축사업을 조기에 착공하도록 환경부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사업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예산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사회적 기업가 육성 '청년 창업 아카데미' 운영

전남도가 혁신적 창업 아이디어와 경영 능력을 갖춘 사회적 기업가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멘토링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청년 창업 아카데미' 운영에 들어갔다.

청년 창업 아카데미는 사회적경제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의 혁신적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전문 교육과 실습, 멘토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과정은 사회적경제의 이해, 선배 창업가와의 만남, 사회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려는 사회적 기업가의 의지와 방법을 수립하는 '소셜미션'의 이해, 비즈니스모델 설계 방법, 시장조사 및 사업아이템 발굴, 사업계획서 작성, 창업자가 알아야 할 실무교육 등으로 이뤄진다.

교육 프로그램은 기존 답답멘토제 외에 외부전문가 총괄멘토제를 신설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반 아카데미는 사회적경제 창업을 희망하거나 준비 중인 도민 중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총 20명의 신청을 받았으며,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총 7회에 걸쳐 대면교육으로 진행된다.

오는 10월에 개최될 '청년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수상하면 내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사전 선발 기회도 잡을 수 있다. 최병남 전남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이번 창업교육이 사회적경제기업가 정신 함양은 물론 사업역량 강화로 이어져 청년 사회적기업가 발굴 및 창업 성공률 제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자치분권·지역 상생발전 전남대서 영호남 대토론회

영호남 전문가들이 자치분권,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광주시는 18일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코스모스홀에서 영호남 대토론회를 열었다.

광주, 대구의 달빛동맹 협력과제로 2016년 시작된 토론회에는 두 지역 자치분권협의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한국 거버넌스학회, 한국정부학회 등 기관이 참여했다. '지속 가능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영호남 대토론회'를 주제로 정순관 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분권협의회 위원들이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김대성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주제 발표에서 "지금까지 지방분권은 주로 중앙의 관점에서 추진돼 왔다"며 정부 분권 정책의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재정 분권을, 최우선 과제로는 지역발전 컨트롤타워 구축과 조광역 협력 실현을 꼽았다.

문영환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수도권 집중을 막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려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영호남 반도체 동맹을 통해 '균형발전 3.0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자치분권과 지역상생발전 영·호남 대토론회 광주시는 18일 오후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4호관 코스모스홀에서 열린 자치분권과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영·호남 대토론회를 가졌다.

광주시 재정 분야 감사서 소송비용 회수 소홀 등 지적

광주시가 업무를 게을리해 승소한 소송 비용조차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8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재정 분야 특정감사에서 24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 감사위원회는 각각에 대해 시정, 주의, 통보 등 조치를 하고 경징계 2명, 훈계 2명, 주의 4명 등 8명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 결과 시 법무담당관실은 지난해 5월 8일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880만원 소송비용 확정 결정 신청을 하지 않았다.

법무담당관실은 이를 포함해 3건에 걸쳐 2180만원을 9개월에서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신청하지 않아 아직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은 확정판결에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때에는 즉시 그 비용을 추심하도록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전남도, 2026년까지 유기농생태마을 100개로 늘린다

2009년 전국 첫 지정 24일까지 시·군서 모집

전남도가 유기농업 확산을 위해 지난 2009년 전국 최초로 지정 추진한 유기농 생태마을을 오는 2026년까지 100개소 확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2022년 유기농생태마을'을 모집한다.

유기농생태마을은 일정 규모 이상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친환경농업을 적극 실천하면서 지역 특색을 살린 생태환경이 잘 보전된 환경친화적 마을이다.

전남도는 농업환경 보전 가치가 높은 유기농업 마을의 성공 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전국 최초로 유기농 생태마을을 지정 시작했다. 특히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제1차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유기농 생태마을을 오는 2026년까지 100개소까지 육성할 계획이다.

현재 전남에는 올해 상반기 지정된 곡성 연봉마을, 해남 태인마을 등 신규 4개소를 포함해 총 38개 유기농 생태마을이 관리되고 있다.

지정 신청요건은 농작물별로 차이가 있다. 벼 농가는 10호 이상의 농가가 참여하는 친환경농업 실천 마을 중 친환경인증 면적 10ha 이상, 유기농 인증면적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의 30%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과수 및 채소 농가는 5호 이상의 농가가 참여하는 친환경농업 실천 마을 중 친환경인증 면적 1ha

이상, 유기농 인증면적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의 30% 이상 조건을 갖춰야 한다.

참여를 바라는 마을은 오는 24일까지 시·군 친환경농업 업무 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유기농생태마을로 지정되면 '2023년 유기농생태마을 육성사업'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사업 대상은 친환경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마을이다. 유기농업 확대에 필요한 생산·가공·유통·체험 관련 시설장비 등 최대 5억원을 지원받는다.

또 유기농생태마을을 활성화를 위해 마을 주민 교육, 마을 가꾸기,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과 연계한 활성화 사업비로 마을당 2000만원을 지원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공공시설·유희시설

마을 문화향유 공간 조성

광주시 '아트벙커' 추진

광주시가 공공시설이나 빌딩이 뜬 유희 시설 등을 마을 주민을 위한 문화 향유 공간으로 조성한다.

광주시는 "생활문화 '아트 벙커'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자치구별로 5개 이내 아트 벙커를 지정해 시범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마을별 자원과 특성을 활용해 주민이 문화예술을 주제로 활동하는 민선 8기 공약이다.

동네 책방, 작은 도서관, 주민센터 등 민간·공공 시설이나 유희 시설을 아트 벙커로 지정해 합창, 연주, 연극, 수공예 등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공연은 물론 교육, 전시, 축제, 플리마켓과 같은 마을 공동체 활동도 이뤄진다.

광주시는 하반기 시범 운영 후 연말 워크숍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광주 전제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요성 광주시 문화체육실장은 "마을 구성구석까지 문화예술이 스며들게 하는 거점 공간이 될 것"이라며 "주민끼리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 사회 공원으로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튼튼한 지킴이 국민건강!
실손의료보험!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